

상가임대차보호법 '8월 국회' 처리 합의

여야, 조찬회동서 의견 모아
계약갱신요구권 연장될 듯
개정 방안은 추가 합의 필요

임차인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상가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민주당·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찬 회동을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개정 방안은 추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임차인의 영업권 보장을 위해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보장기간을 8년으로 하고 임대인에게 소득세와 보유세 감면 등 세제 혜택 등 반대급부를 주자고 맞서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원칙적인 합의 했지만 세부내용은 조금 더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

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10년을 주장하고 한국당은 8년을 주장한다. 세제혜택을 주는 문제 등도 최종 합의가 안 돼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8월 국회에서 처리한다.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새누리당 시절인 지난 2016년 발의한 규제프리존법(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김경수 전 민주당 의원이 3월 발의한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16일 발의한 지역특구법을 병합

해 업종상자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홍 원내대표는 "기재위에서 논의하고 합의가 안되면 국회 민생경제법안 TF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융합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정보통신융합법은 과방위에서 간사간 논의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안위에서 논의해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연동형 비례제' 선거제도 개혁 촉구

야4당 개혁 공감대 결집 이뤄
평화당 "민주당만 소극적"

민주당회당은 지난 1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히 재개되는 것을 보고 아주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다"며 "관건은 민주당의 자세"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민주당 대표 후보자들이 개헌과 연계돼 신중해야 한다는 대통령 의지와 전혀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당내에서 친문 경쟁이 화두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강력히 지지하고 있는 것에 어깃장을 놓는다면 결단 친문이지 속은 친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서도 "대통령께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국회에서 재개되고 있는 건 아주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셨다"며 "이는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 입장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이행할 책무가 있다"며 "대통령 의지 따로 여당 방향 따로 되면 정부 여당이 한집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에서 지지율만 믿고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정치

인의 이익, 정파적 이익을 볼 게 아니라 국민에게 어떤 것이 도움되는가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병관 원내대표는 "정외대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대통령께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선거제도 개편에 야 4당이 적극적인 입장을 내놓지만 민주당만 소극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나서서 명확하고 강력한 입장을 보여준 만큼 민주당은 더이상 유불리 따지지 말고 즉각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경환 의원은 "대통령, 국회의원, 선관위, 야 4당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데 민주당만 고집을 피우고 있다"며 "같은 친문, 속은 친문이 대통령을 거스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분명하게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30%대 지지율이 20%, 10%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천정배 의원은 "대통령의 입장 표명으로 민주당의 논의에 나선다면 다행이었을텐데 왜 대통령이 주도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인지 유감스럽다"고 아쉬워했다. 천 의원은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은 대통령의 공약이자 촛불 국민혁명이 정칙권에 부여하는 과제"라며 "이제 민주당만 나서면 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뉴시스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한 정책토론회.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2018 통일공감포럼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한 모색' 정당·종교·시민사회 정책토론회에서 앞줄 왼쪽부터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김홍걸 민화협 상임 공동대표, 한창민 정의당 부대표,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이 파이팅을 하고 있다

정치인 불법사찰한 전 국정원 국장 실형

09년 '포청천' 공작팀 운영
징역·자격정지 각 1년 선고

이명박 정부 시절 여야 정치인들을 상대로 불법 사찰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국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17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수집했다"며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해 국가안전 보장 등 국정원 직무와 관련 없이 불법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의 상명하복 특성상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하지만, 공무원에게 삼급자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원칙에 비춰보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조직 내 인사나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피하려 위법 지시임을 알면서도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뒤늦게나마 반성했고, 사찰 여부나 대상자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35년간 국정원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며 국가에 봉사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원세훈(67) 전 국정원장 등의 지시로 국정원 내 불법 사찰 일환으로 이른바 '포청천' 공작팀을 꾸리고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포청천 공작팀은 한명숙(74) 전 국무총리와 박지원(76) 민주당 평화당 의원, 박원순(62) 서울시장 등 당시 유력 야당 정치인들과 민간인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불법 사찰을 했다. /뉴시스

文, 지지율 60%대 회복

지난 주 대비 2%p 상승... 하락세 마감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졌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세를 마감하며 60%대를 회복했다. 한국갤럽은 지난 14~16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7일 발표한 8월2주차 여론조사 결과(신뢰수준 95%·표본오차 ±3.1%p)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60%, 부정평가는 32%로 집계됐다. '어느 쪽도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 '모름·응답 거절' 비율은 4%로 조사됐다. 지난 주 58%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 지지율까지 떨어졌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일주일만에 2%p 상승하며 8주만에 하락세를 벗어났다.

이번 소폭 반등으로 6월2주차(79%) 이후 크게 그렸던 하락곡선을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오른 배경에는 문 대통령의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합의 소식이 전해지는 등 긍정적인 외교안보 이슈가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문 대통령의 국민연금 개편의 사회적 합의 약속과 임금장 면세제 도입 언급,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 합의 등 국내 정치·사회 현안도 지지를 상승요인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대북·안보정책(19%)과 북한과의 대화 재개

(13%)를 주로 꼽았다. 최선을 다함(8%)·서민 복지확대(7%)·소통 공감능력(6%)·외교 잘함(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평가 이유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부족(38%)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친북 성향(14%)·최저임금인상(8%)·세금 인상(4%) 등이 부정평가 이유로 제시됐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대비 4%p 상승한 44%로 가장 높았고, 정의당(15%)·자유한국당(11%)·바른미래당(6%)·민주당회당(1%) 순으로 뒤를 이었다. 무당층은 23%로 집계됐다. /뉴시스

2018 대한민국 대표축제 축하! 전주매일 창간

www.firefly.or.kr

제22회 자연의 빛 생명의 빛 미래의 빛

무주 반딧불축제

The 22nd Muju Firefly Festival

2018. 9.1 ~ 9.9 일

무주군일원 남대천, 지남공원, 반딧불전통공예문화촌 등

• 주최, 무주군 • 주관, (사)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 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45 • 문의, 063)320-5004-17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환경부 • 전라북도 • 한국관광공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